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6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이수진 · 윤종균  
민형배 · 박희승 · 서미화  
손명수 · 모경중 · 김남희  
김 윤 · 이해식 · 박주민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·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,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.

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교육·상

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3항 신설).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5 신설).

다.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의2 신설).

라.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,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,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).

마. 정신질환자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6조제2항 신설).

바.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, 임차자금 지원,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,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(안 제37조).

사.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의2 신설).

아.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, 가족 상담, 가족 돌봄 및 휴식,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8조).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5(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담 등 서비스 연계
2.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권익 옹호 사업
3.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연계

4.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회복 지원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개인별지원계획수립) ①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해당 정신질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(이하 “개인별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을 받는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,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
수·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

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·수정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·수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, 수립 방법 및 내용, 승인통보·신청·변경·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4조(고용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, 취업알선, 고용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,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, 직장체험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취업 정신질환자의 직업지도 및 고용 촉진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⑥ 기업, 정신건강증진시설·정신건강복지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센터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 
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7조(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, 퇴원등이 예상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·거주와 치료·재활 등이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복귀 또는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임대주택 지원, 자립생활정착금 지원, 임차자금지원, 단기

거주 주거지원, 지역사회 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복귀 또는 거주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주간활동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주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8조(가족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
2.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
3.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
4. 가족 자조모임 지원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실시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·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등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·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,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제4항----- ----- -----.
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<u>&lt;신 설&gt;</u>	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5(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1.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담 등 서비스 연계

2.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권익 옹호 사업

3.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연계

4.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회복 지원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2(개인별지원계획수립)

①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해당 정신질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(이하 “개인별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 
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을 받는  
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  
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정  
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개인  
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  
야 한다.

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  
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 
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결정  
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정  
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특성을  
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,  
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  
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  
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 
해당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 
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  
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 
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 
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 
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 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 
요청하여야 하며, 개인별지원

	<p><u>계획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</u></p> <p><u>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·수정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·수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.</u></p> <p><u>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, 수립 방법 및 내용, 승인통보·신청·변경·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제34조(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)</u></p> <p><u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</u></p>	<p><u>제34조(고용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</u></p>

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,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, 취업알선, 고용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,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, 직장체험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취업 정신질환자의 직업지도 및 고용 촉진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제36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 
활동 등 지원) (생략)

<신설>

제37조(지역사회 거주·치료·재  
활 등 통합 지원) ① 국가와 지  
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  
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 
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 
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  
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  
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 
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

⑥ 기업, 정신건강증진시설·정  
신건강복지센터, 동료지원센터,  
동료지원센터 등에서 정신질환  
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  
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전부 또  
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고용지원 등에 필  
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
정한다.

제36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 
활동 등 지원) ① (현행 제목  
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  
신질환자의 문화·예술·여가  
·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 
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7조(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 
위한 통합 지원) ① 국가와 지  
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  
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  
질환자의 퇴원등의 여부에 관  
한 사항을 조사하고, 퇴원등이  
예상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  
회 복귀·거주와 치료·재활  
등이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도  
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

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·치료·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복귀 또는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임대주택 지원, 자립생활정착금 지원, 임차자금 지원, 단기거주 주거지원, 지역사회 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복귀 또는 거주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2(주간활동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주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(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(가족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

2.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

3.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

4. 가족 자조모임 지원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실시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·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